



보도	2023.12.11.(월) 조간	배포	2023.12.8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금융국 대부업검사1팀	책임자	국 장	홍석린	(02-3145-8270)
		담당자	부국장	문병모	(02-3145-8272)

**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.**  
**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,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등**  
**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.**

□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, 대부채권 매입 추심회사 검사, 불법 대부광고 정비,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.

□ 이번에는 대통령 주재 「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(11.9.)」 후속 조치 일환\*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\* ①'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(11.14.), ②'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'(11.16.), ③'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(12.7.)' 등
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,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겠습니다.

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를 하는 한편,

-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\*을 적극 추진하여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습니다.

\*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 등 원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개선방안 마련신속 집행

# I . 추진 배경

- 금감원은 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범정부TF의 일원으로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-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(4~5월),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에 대한 수시검사(8~10월),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 광고 정비(11월) 등을 실시하는 한편,  
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시 대응요령,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·안내하고 있습니다. (붙임 참고)
- 최근 고금리·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,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, 반복적 전화·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  -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\*하고,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
\* ('20년) 580건 → ('21년) 869건 → ('22년) 1,109건 → ('23.1~6월) 902건

⇒ 대부업자의 민생침해·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

-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,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

## [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 계획(안)]

- (점검대상) 10개 대부업자 (금전대부 5사,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)
- (일정 및 점검반) '23.12.11 ~ '24.1.30. 중 4개반이 현장점검 실시
- (점검내용) 불법·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,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

## II. 주요 현장점검 항목

-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,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하고,
  - 건전한 채권 추심 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하겠습니다.

### <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 점검 사항 >

#### 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

-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
- 소멸시효 완성 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 하고 있는지
-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 제기 등 행위가 있는지

#### ②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,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행위

-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(185만원)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
- 기초수급자, 중증환자, 장애인,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
-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

#### ③ 추심업무 착수전 착수사실 통지의무

-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하는지

## III. 향후 계획

-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·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, 폭행·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.
-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, 「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- 한편, 금감원은 「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\*」를 운영(12.6.)하고 있으니,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 > 민원·신고 >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① **불법 대부계약** 및 **불법 채권추심**의 주요 경로로 악용된 **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** 대상 고객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**온라인 플랫폼 영업방식**을 개선(2.14.)하고,  
  
지자체(서울, 경기) 등과 **합동점검**을 실시(4~5월)하여 **개인정보 유출 행위** 및 **사이트 內 불법행위**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한 바 있습니다.
- ② **대부업자 준법 워크숍**(4.27.), **전국 순회 설명회**를 개최(10~11월, 5차례)하여 주요 법규 위반사례, 민원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**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노력**을 촉구하였습니다.
- ③ **대부채권 매입추심 대부업자**에 대해 **테마(현장)검사**를 실시(10개사, 8~10월)하여 **채권추심 관련 내부통제,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**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- ④ **불법 대부 광고 근절**을 위하여 인터넷 동영상 **대부광고**(3.29.), 정부지원·서민금융 대출 사칭 **불법광고**(11.15.)를 점검하여, **관할 지자체 위반사항 통보, 방심위 차단의뢰** 등 조치하였습니다.
- ⑤ 피해자들이 **반사회적 대부계약**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**대부계약 무효소송**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 
(법률구조공단과 MOU 체결, 12.7.)
- ⑥ 금융소비자가 **불법 채권추심 행위**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**채권추심시 대응요령, 유의사항** 등을 **지속 안내**하고 있습니다.

**(주요 보도자료)**

-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('23.2.20.)
-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! ('23.3.20.)
-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! ('23.6.19.)
-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('23.7.19.)